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경쟁력 '최상위'

전북연구원, "주요 경쟁국별 평가 결과, 전주 올림픽 유치 사실상 선두"

IOC 절차개편에 전주 유리... 정부 조기승인·통합 운영체계가 핵심 과제

IOC의 개최도시 선정절차 개편에 따라 전주 하계올림픽의 유치 가능성을 주요 경쟁국별로 분석한 결과, 전북 전주가 주요 경쟁국 대비 최상위 수준의 유치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연구원(원장 최백렬)은 이슬브리핑을 통해 주요 경쟁국 동향, 유치 가능성 진단,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실패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IOC는 기존 지속협의-집중협의의 이분화 구조에서 전환단계로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전환단계는 지속협

의를 일정 기간 진행해 개최계획이 구체화된 일부 유치희망도시를 선별하고 심층 평가를 실시하는 단계로서, 재정적·운영적 실행 가능성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IOC의 의지를 반영한 신규 절차다.

이에 따라 재정보증의 조기 입증과 대규모 국제스포츠이벤트 개최 경험 이 핵심 평가요소로 부상하면서 유치 경쟁 환경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주요 경쟁국을 살펴보면, 인도는 14억 명 규모의 시장과 IOC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거버넌스의 불투명성, 도핑 문제, 저조한 올림픽 성적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카타르는 경기시설의 약 95%를 확보한 인프라와 국제 스포츠 외교력, 재정적·운영적 실행 가능성을 갖추고 있으나, 높은 기후, 높은 이주민 비율, 인권 문제가 주요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4개 도시 간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후보도시가 확정될 경우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속협의 단계의 전략평가 요소를 기반으로 유치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독일, 칠레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OC 내부 영향력, 재정기여도, 국제스포츠이벤트 경쟁력을 반영한 전환단계 기반 지수에서 최상위 수준을 기록하며, 인도, 카타르 등 아시아 국가 대비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전북 전주는 전환단계 진입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은원 연구위원은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실패 원인 중 하나는 유치위원회의 부재로 인한 추진체계 분산"이라며 "이로 인해 일관된 유치 전략 실행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조기 승인과 더불어 유치위원회 조속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1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7일 노홍석 도지사 권한대행 주제로 실·국장 등 주요 간부진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현안 대응 회의'를 열고, '도정현안 대응 회의'를 열고 권한대행 체제 아래 안정적인 도정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도,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현대차 투자 후속조치·예산 확보 등 주요 현안... 속도감 있게 챙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가운데, 행정 공백을 차단하고 주요 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비상 대응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전북자치도는 7일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현안 대응 회의'를 열고 권한대행 체제 아래 안정적인 도정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관영 지사가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으로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데 따른 것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주요 정책의 연속성 유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노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지방선거 정쟁의 여파로 주요 현안 추진이 지연되는 소극 행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는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각 실·국장을 중심으로 소관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지휘부의 수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신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도는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와 대형 국가 공모사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오는 5월 말 정부 부처 예산 편성 마감과 5~7월 공모사업 결과 발표 일정에 맞춰 중앙부처 방문 활동을 강화하고, 쟁점 사업별 맞춤형 논리를 통해 지역 핵심 사업 선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평가 받는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와 관련하여도 후속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도는 기업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실무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쟁점 사항에 대한 대응 논리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전에도 적극 대응한다. 도는 여름철 재난 대비 안전 점검 강화와 함께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 민생 안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1만호 기자

도, 인구감소지역-기업 협업 공모 선정

행안부 공모 전국 5개소 중 김제·순창 등 2개소 선정

기업-지역-사회연대경제조직 연계 등 상생모델 구축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인구감소지역-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김제시·순창군 2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정부-기업-지역이 함께하는 상생 협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선도 사례를 만들어가기 위해 추진됐다.

행안부는 전국 88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최종 심사에서는 전국 5개 선정 대상 중 △순창군(신선식품 배송 분야)과 △김제시(지역특산물 활용 분야) 2개 사업이 선정되어 각각 국비 4,000만원을 확보했다.

순창군은 기아자동차(KIA)의 카고형 전기차(KV5) 차량 2대를 활용해 행정리 단위까지 직접 찾아가는 신선식품 배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교통 인프라 부족과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신선식품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식품 사막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순창군은 배송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고품질을 위한 건강·돌봄 프로그램을 결합한 복합형 서비스를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먹거리 접근성 개선은 물론 고품질의 건강관리와 정서적 돌봄까지 아우르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1만호 기자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면 단위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한편, 가맹점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복지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코레일유통과 손잡은 김제시는 전국 최대 논공 주산지라는 강점을 적극 활용한다. 그동안 선별 과정에서 상품 가치가 낮아 저가로 처분되던 반태콩과 새콩 및 묵안아콩을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탈바꿈시키는 반태콩 업사이클 푸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코레일유통과 협력해 반태콩을 원료로 한 고부가가치 식품을 개발하고, 올해 하반기 주요 KTX 상권에서 판매 및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SNS 홍보 마케팅을 주력하며 MZ세대와 건강에 관심이 높은 3070세대 대상으로 김제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반태콩의 새로운 소비처를 확보하고 지역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김제의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공모사업을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의 자생적 생태계가 결합한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1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노홍석 권한대행, 국토부·대광위·기획예산처 관계자 잇따라 방문

새만금 트라이포트·전주권 광역교통망 등 핵심 SOC 예산 반영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2027년도 국가예산 정부안 반영을 앞두고 새만금 SOC와 광역교통망 확충, AI 기반 미래산업 육성 등 핵심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7일 노홍석 전북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핵심 관계자를 잇따라 만나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기획예산처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전북 주요 사업의 정부 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중앙부처의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추진됐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와 이차전지 기업 집적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해, 이를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인프라와 전략산업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노홍석 권한대행은 먼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회를 방문해 대광법 개정에 따라 추진 중인 전주권 광역교통 시설 구축사업 16개 사업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2조 3,850억 원 규모로, 전북 광역권 교통혼잡 해소와 생활권 연계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이다.

이어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과의 면담에서는 새만금 활성화의 핵심 기반인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주요 국도 건설사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

히 새만금 국제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과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실시설계비 반영 등을 건의하며,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서는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5대 중점사업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안 반영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업은 △새만금 신항 집안시설 및 배후부지 재정사업 전환 △새만금 K-푸드 수출허브단지 조성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건립 △온대랜드 제조 특화 AI전담 교육센터 운영 △한국형 필드데이터 활용 상용차 전동화 지원 기반 구축 등이다.

도는 새만금을 글로벌 물류·산업거점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K-푸드와 AI·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건립은 전주교도소 이전부지를 활용해 국가 문화 인프라의 지역 균형 배치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설명했다.

노홍석 전북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새만금과 미래 신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이뤄져야 전북의 성장동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북 핵심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만호 기자

도,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본격 추진

고용보험료 20%·산재보험료 50% 지원... 최대 3년 지원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직원 고용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려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자영업자가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 산재보험료의 50%이며, 개인별 지원 개시 시점부터 최대 3년간 지원된다. 올해 신청자는 2026년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폐업 시 가입 기간과 납부 실적 등에 따라 실

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가입자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5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우편·방문·이메일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1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